

##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조치

북한은 지난 7월 1일자로 물가 및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쌀 수매가격을 kg당 80전에서 4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판매가격을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하였다. 즉 식량배급제는 유지하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전의 고가수매·저가판매 정책을 포기하고 저가수매·고가판매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북한이 식량배급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용품에 대한 상품배급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sup>1)</sup> 과거에는 상품배급표가 없을 경우에는 옷돈을 주고도 생필품을 살 수 없었으나,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물가가 인상됨에 따른 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임금 인상 조치도 취하였다. 생산직의 임금을 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피 직종인

채탄부의 경우에는 임금을 6,000원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기업이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소속 노동자에게 업적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토록 하였다. 아울러, 생산성과가 미미한 남포유리공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였다.<sup>2)</sup>

한편 북한은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일부 사회보장제도는 유지하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택임차료를 징수하고, 수도·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였다.

북한은 가격현실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환율현실화 조치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環球時報 2002년 8월 15일자 보도.

2) 기업을 통폐합하는 조치 이외에 일부 공장에서는 직장·직위를 통폐합하고 노동자들에게 종전보다 2~3배 많은 작업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조선신보 2002년 7월 19일자 보도).

외신 보도에 의하면,<sup>3)</sup> 북한은 8월 1일자로 환율을 달러당 2.15북한원에서 150북한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조선노동당의 일관된 방침하에 장기간의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sup>4)</sup> 지난 2년간 실시한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에의 경제시찰단 및 연수단 파견을 통하여 습득한 경제정보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1. 경제개혁조치 실시 배경

북한이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지식인리프 도모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회복하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경제계획과 실적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실리를 도모하고, 쌀 수매가격 인상과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농민들의 증산과 생산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실리'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개별 기업의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전 인민의 수요를 보장하는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sup>5)</sup> 개별 기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제품을 모두 생산한 다음에 비로소 추가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기업이윤으로 축적할 수 있다.

둘째,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규모가 커진 지하경제를 정상적인 국가경제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회복을 도모하고, 기존 사회주의의 병폐인 평균주의를 시정하여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실현코자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자연재해 등으로 재정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지난 1987~93년 기간 중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주요 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됨에 따라 완충기(1994~96년) 경제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축소하는 것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3) AFP 통신 2002년 8월 18일자 보도, 중국 環球時報 2002년 8월 15일자 보도 등.

4) 2002년 8월 6일자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가 작성한 *DPR Korea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 DPRK economic reforms* 자료에 의하면, 북한 관료들이 장기간의 숙고를 거쳐 개혁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5) 북한에서 '실리보장'이란 나라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인민들의 복리증진 및 전 사회적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함(로동신문 2002년 8월 6일자 보도).

## 2. 경제개혁조치의 기본방향 및 성공조건

북한이 최근 실시한 경제개혁조치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북한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최근 '사회주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는 길이며, 경제실리를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때,<sup>6)</sup> 북한의 특성상 이 지시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논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경제개혁조치는 '생산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북한이 실시한 경제개혁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의 경제개혁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식량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원적(二元的)

은행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인 금융개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이끌어 내어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능 중에서 예금·대출 업무를 상업은행에 이관하고,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물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번의 경제개혁조치가 실패할 경우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더욱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3.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경제개혁조치의 성공을 위하여 대남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후속조치로 환율을 현실화한 결과 북한의 대남 교역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 로동신문 2001년 10월 22일자 보도.

7)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자 보도.

독립채산제 강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로 이익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남북위탁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금번에 취한 경제개혁조치에는 외자도입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북한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외부자본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趙 泳 照】